

건축제도 50년과 행복한 건축제도 방향

Architectural System Over the 50 years and the Direction to a Happy System

글. 이종정_ Lee, Jong-jung · 건축사 / 에스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50년 동안 제도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라고 한다. 규범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경제·교육 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한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자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 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50년의 제도 변천

대한건축사협회 50년의 제도생성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 관련법, 협회의 제규정은 물론 그 당시의 시대 배경,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정과 성장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건축은 경제 압축성장과 도시 집중화에 따라 산업시설과 주택보급 과정에서 안전과 대형사고로 법체계와 제도의 큰 변화를 나타내고 1990년대는 WTO의 개방화에 따라 건축제도가 국제 기준으로 바뀌어 갔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요구되어 왔고 중반 이후 현재는 품질과 성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녹색 건축, 에너지 절약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50년간의 건축제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본다.

1. 1965년 협회 창립과 건축제도의 출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군사 최고회의에서 구법 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에 따라 5개월의 짧은 기간에 탄생한 건축법(1962.1.20)과 건축사 자격과 업무에 근간이 되는 건축사법(1963.12.6)이 제정되었다.

사회 배경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막 100불을 넘기고 경제성장률은 1.2%에 불과했다. 인구는 2천 8백만 명으로 세계 170여 국가 중 166위의 최빈국으로 주택보급률 등 통계조차 변변치 않았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발기인회가 구성되고 창립 준비에 착수하여 건축사의 품위 보전 업무의 개선과 건축물을 개량 발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5년 10월 23일 설립되고 그 해 각 시·도 건축사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해 12월까지 임원 선출을 마쳤다. 그러나 시작은 평탄하지 못했다. 제1회 건축사 시험 파동이 있었다. 각 대학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자격과 종전 제도의 특례 전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철시킨 것이 첫 번째 건축사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였다. 신분증 및 배지를 배포하여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역 활동의 신분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초기 조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1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1967.4.5~5.15)를 열어 30만 명의 관람객이 참관한 큰 전시회로 현재의 한국 건축산업대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각 사무실의 설계표준작업 등 도서 작성 기술 등 건축기술향상을 위한 강습회가 실시 되어 회원교육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이 시기는 국회의사당 설계 현상의 자격과 절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동안 각종 행사와 건축계의 여론 등이 제도를 만들어 가는 초기 시기이다.

2. 1970년대 협회의 정착기, 건축제도의 여명기

제3, 4차 경제개혁 5개년 계획 기간으로 국민소득은 610불, 성장률 7.9%, 인구는 3천 4백만 명이였으며 주택보급률은 78%였다. 우리협회 회원은 1975년 1,580명, 허가면적은 25,969,000㎡ 정도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다.

건축법은 전면 개정되어 고층화가 가능하도록 용적률의 완화를 통해 건축기술 발전이 계기가 되어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안전 강화와 행정처벌 등이 강화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및 남북교류와 제1차 석유 파동, 1975년 대연각 호텔 대형화재는 새로운 법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고층 건축물의 화재로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처음 있었고, 남북교류로 환경정비, 조경 식수 등 공해방지 필요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

경제성장은 차량 증가로 이어져 건축법에서 주차문제의 한계가 있어 별도의 주차장법이 제정(1979.4.17)되었다.

제1회 건축사대회가 건축대전과 함께 1971년도에 최초로 개최되어 건축의 대국민 홍보와 건축사가 문화창조자로 자부심과 회원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회원 행사 제도가 되었다. 또한 회원 복지제도로 그동안 설계비 덩핑 방지를 위하여 준비해 왔던 서울건축사회가 복지회를 설립함으로써 각 시·도 건축사회에도 확산돼 복지회가 설립되어 협회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한 시기이다.

협회는 1974년 임대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서울 중구 서린동의 4층 건물을 매입했다. 1975년에는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회원 작품전을 개최함으로써 협회의 운영 안정과 건축문화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며, 1977년에는 최초의 건축사 의무보수교육이 인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3박 4일 실시되어 건축사의 교육제도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3. 1980년대 정치의 격동기와 협회 안정발전기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10.26)로 유신정치인 제4공화국을 마치고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1980.9.1~1988.2.24) 집권기로 고도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져 성장률은 7.7%, 국민 1인

당 소득은 2,400불이 되었으며 인구는 4천만 명, 주택보급률 71.2%, 협회 회원수(1985년)는 2,369명, 허가면적은 38,217,000㎡이었다.

건축법은 경제성장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감리제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상주감리제도를 강화해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했다. 한편으로는 건축 민원이 간소화되어(1982.4.3) 건축사 확인만으로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중간검사 대상 건축물도 축소되고 용적률 적용이 지역별로 정하도록 했다. 1986년에는 소규모건축물 규제가 완화(1986.12.31)되어 놓여준 주택과 축사용 소규모 건축물이 허가에서 신고제도로 절차가 완화되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보조사를 건축사보(1980.1.4)라 하고, 건축사 업무가 강화되어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 책임제도를 도입·운영토록 하고 벌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특히 시끄러웠던 건축사 시험 특례(1989.4.1)는 건축직 공무원과 외국건축사에게 시험과목 일부면제가 시행되었다.

협회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관 일부를 개정했는데 조직 강화와 사업활성화 근거를 마련, 정관 목적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국가의 건설시책을 건축문화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이 시기는 국제 교류의 확대시기로 1988년 사우디 공대 기술 연수원생이 국내에 파견되어 정립, 정일, 공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연수가 이루어졌다.

1984년에 제1회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제2회에 회원국이 됨) 일본 건축사 연합회 초청으로 방일하고 그 해 일본 건축사 연합회와 교류각서를 체결해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AIA 총회에 처음으로 제15대 오용석 회장이 참석하고 이탈리아 등 교류 확대가 활발하였다.

서초동 회관(구회관)이 1985.3.29 준공되고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으며 최초로 1989년에 제1회 전국 건축사대회가 개최되었다. 도중 중단도 되었지만 현재는 격년제로 시·도 건축사회 순환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1987년 회원 기대가 컸던 건축사 연금제도가 실적회비를 재원으로 시작되었으나 당초 연금설계의 문제점 등으로 1995년 청산되었다.

4. 1990년 설계시장 개방화와 IMF 외환위기의 고난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이어진 시기이다. 건축행정의 큰 변화로 협회는 WTO의 개방화와 건설업체 설계검업 요구 등으로 건축개혁을 시도하여

시장개방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계속되어 성장률 9.6%, 1인당 국민소득은 12,000달러로 중진국 진입을 했고 주택 보급률은 86%, 협회 회원수는 5,294명, 건축허가 면적은 123,755,000㎡(1995년 기준)이었다.

1997년 IMF로 건설경기는 반토막이 났고(1998년 건축허가면적 50,964,000㎡) 우리협회도 구조조정과 운영의 변화가 크게 있었으며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직까지 그 후의 시장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법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어 전문개정(1991.5.31)되었으며 규제를 탈피하고 간소화된 건축정책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1994.10.21),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1995.6.29)는 국정에 불만을 증폭시켜 시설물의 안전관계와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과 인명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1995.12.20)되었다.

건축사법 개정(1991.5.31)에서는 공사감리 확대(책임감리)와 건축사의 사후책임이 강화되었고, 건축사 시험제도는 종전 1, 2차 시험에서 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 시험으로 구분되었고 1차 예비시험 합격자는 자격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건설기술 관련 1급기사와 건축사보는 동등한 7년의 사무소 경력으로 조정되었다.

협회는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요구가 1994년부터 제기되어 1995년, 1997년까지 지속되었고, 1차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격 처리되었고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1997년 요구는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여 건설사 설계 겸업을 당사 사육에 한해 설계 업무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1990년대는 시장개방화와 건설시장의 변화로 제도선진화와 경쟁력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도 건축설계 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협회에서도 처음으로 체계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 세계화를 위한 도전이라는 부재를 달고 언론사를 통해 대국민 발표회를 갖고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국내 건축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남북교류의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담은 등 도약의 전환기로 정했다.

1995년은 건축사 대량 배출기로 지난 30년간 안정적으로 선발해오던 건축사를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배출인원 6,555명보다 많은 6,762명이 6년간(1995~2000년) 배출되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불황과 맞물리고 그 이후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을 못해 현재 시장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이어 국제 교류가 활발하여 한몽 상호협력, 한중일 교류 협력 협의회와 제10회 아카시아포럼(1999.9.13)이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협회 창립 당시부터 도서신고에서 도서등록 제도로 이어져 오면서 설계비 덤핑방지 역할과 각 시도 복지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행정쇄신위원회의 도서등록제도 폐지 결정으로 회원복지 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왔고, 1995년에는 건축사 연금제도도 780억 원의 기금이 청산되었다.

그리고 1997년 협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건축연구원 설립에 이어 교육원 건축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정책수립과 회원을 위한 교육, 기술서비스를 시도하였으나 재정 지원의 어려움으로 사무처 조직에서 업무를 이어가도록 하였다.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와 1994년 ‘한국 건축전’이 ‘한국건축문화대상’으로 명칭을 바꾸어 공동운영 되어오다 1998년 자주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1999년은 정부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정한 건축문화의 해로서 건축엑스포와 한국건축 100년전이 개최되었다.

5. 2000년 협회 40년 국제화 시대 협회도약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로 이어간 시대이다. 국민소득은 10,800불을 넘어섰고 주택보급률은 96.2%, 주택호수는 1,147만 호가 되어 천만 호를 벗어났다. 우리협회 회원은 8,104명, 허가면적은 111,506,000㎡(2005년 기준)이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기업, 금융의 구조조정과 가치창출 노력의 결과로 후기 중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였다.

건축법은 1980년대까지의 촉진법 시대의 법체계에서(개발주도시대) 1990년대의 건축행정 문민화의 조정을 거쳐 2000년대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종합계획관리체계로 이어졌다. 알기 쉬운 건축법(2008년)으로 전부 개정되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2005년의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에 이어 내부마감재료 사용 강화(2008.6.5),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도입(2009.3.6), 책임 행정체계 확립(2009.4.1), 마감재료의 강화(2009.12.29) 등으로 자연과 환경의 쾌적한 삶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었다.

건축사법은 건축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자유 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건축설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축사예비시험도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에 한해서 자격 부여토록 함으로 대학 건축학 교육이 건축사 양성 교육제도로 국제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실시되어 온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공고 제도를 설계비

담합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해 2008년 폐지 권고하였으며, 이는 아직도 혼란스럽게 한다. 협회는 2000년 들어 UIA에 회원 단체가입(2000.6.25) 함으로 국제화 시대의 전문가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고 2017년 서울 UIA세계건축대회 개최를 유치하였다.

건축학인증원이 설립되고 2002년 드디어 건축학 5년 제도가 실시되어 신입생이 모집되었다.

협회는 2003년 구회관 개축 승인이 되고 현회관이 2006.12.8 준공됨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협회의 사업들이 안정되고 활성화 되어갔다. '한국 건축산업대전'의 이름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건축문화신문 창간(2006.9.9), 서울국제건축영화제(2009.11.19) 개막식을 가졌다.

건축기본법의 탄생. 양적 충족에 맞추어진 시대의 건축법에서 질적 만족의 도시건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건축기본법 제정(2007.12.21)이 건축사법에서의 설계 중심 업무에서 공간환경의 설계 주체로 건축사 업무를 확대하였다.

협회 발전기본계획(2009년)은 건축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회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축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봄으로 건축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 사업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 제도이다.

6. 2010년~현재, 미래 건축 50년의 구축기

이명박 실용정부에 이어 행복한 국민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115%, 주택호수는 1,500만 호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구조는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일본의 버블 붕괴 25년의 경제구조를 닮아가고 있다.

협회 회원수는 9,600명, 허가면적은 138,049,000㎡(2014년 기준)으로 최근 허가 통계를 보면 L자형으로 성장성숙기의 형태로 양적 성장 조정기로 보인다.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에 대하여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다.

건축법은 건축기술의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체계 전환으로 바뀌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 효율성 향상과 고층 건축물의 구조 안전,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 장수명 건축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또한 안전 품질성능이 중시되어 내진등급강화 및 내부마감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한편으로 규제완화(2014.1.14)로 건축 관련법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건축심의의 공정성 확보(2014.5.28)로 건축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건축사법은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제도 개편으로 이루어지고 건축사 시험제도에서 건축학

5년을 위한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제도 도입을 하고 있다.

협회는 2010년 공제 사업 정관개정 의결이후 공제조합 창립총회(2010.12.6)에 이어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5년차에 있으며, 2015년 독립법인 공제조합이 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3.6.4) 제정으로 건축산업의 지원 육성과 진흥을 기대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은 산업정보체계 구축,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 못하도록 하고 발주방식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한 발주방식을 선정토록 하였다.

건설업체 설계 겸업요구도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포함시켜 계속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도 건설협회장의 포기가 합의된 상태이나 언제고 설계겸업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관개정(2013.4.10)에 따라 회장선출이 간선제에서 회원의 직선제 임기 3년으로 현재 제31대 회장이 탄생된다.

이제까지의 법 제도 변천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법, 건축사법, 관련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권은 제3공화국 이후 7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경제는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최빈국에서 3만 불의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인구는 2천 8백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되었고 주택보급률은 115%에 이르렀으며 주택호수는 1천 5백만 호가 되었다.우리 협회 회원도 422명으로 시작해 9,600명에 이르며 건축허가면적도 10,000,000㎡에서 141,346,616㎡로 수적 성장을 하였다.

건축법은 제정 이후 92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건축사법은 28회, 협회 정관 36회, 회장은 31대에 이르고 있다. 이 모두 제도가 만들어 내는 환경이다.

앞으로도 제도는 환경의 방향에 따라 변할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다양한 사회, 문화 요구와 첨단기술과 정보통신의 기술 환경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얼마 전 다큐프라임의 행복건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집을 기억하고, 소통을 넘어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의 유산으로 남는 것이 행복한 건축이라 답하였다.

끝으로 협회의 “지나온 나아갈 50년” 토론회의 김현진 건축사 토론문 중에서 “저는 공공성과 우리 문화와 미학처럼 건축에 과하게 부과된 의미를 힘겹게 쫓기보다는 설계를 잘해서 좋은 건축과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궁극적으로 설계의 중요성과 건축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다”는 젊은 미래 건축사가 있어 행복한 건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